
통상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관련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 – 한국 통상부처와 입법부 관계를 중심으로

고보민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조교수

Text Network Analysis of Korean Trade Stakeholder's Interactions – A Focus on the Trade Ministry and the Legislature

Bomin Ko^a

^a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05 October 2020, Revised 15 December 2020, Accepted 24 December 2020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wo of the most significant trade stakeholders in Korea, the Trade Ministry and the Legislature, using text network analysis. Tackling seven Action and Plan Reports for Requests from Parliamentary Inspection relea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conducts a topic modelling analysi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ports for the three trade-related institutes: the MOTIE headquarte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such traditional topics of the MOTIE as enterprise, industry, business, management, development were frequently appeared in the reports. Trade-related topics including export, trade, commerce, investment, overseas, domestic, dispute, cooperation, efficiency, negotiation, service, promotion were repeatedly shown. Lastly, a case study on 2019 Parliamentary Inspection Report showed specific trade-related topics and relevant contents that raised issues in that year.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text data driven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ports between the MOTIE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established as so called 'trade policy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valuable not only for the two but also the rest of the trade stakeholders in Korea.

Keywords: Trade Policy, Trade Stakeholder, Korea's Trade Stakeholder, Trade administration, Trade Legislation, Text Network Analysis,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JEL Classifications: C8, F1, K4

^a Sole Author, E-mail: bomingo@catholic.ac.kr

I. 서론

통상 이해관계자란 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중 하나인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국가 내 모든 개인이나 조직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통상정책이란 한 국가 내 존재하는 대외경제정책의 종류 중 하나로 통상진흥, 통상협상, 통상관리 등의 과정을 포괄하는 행정부의 방침이나 협의의 결과이다. (Park Chang-hyun, 2008) 우선 통상진흥은 통상협상의 전 단계로 무역 및 투자 진흥 관련 활동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후 산업부) 내 무역투자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통상협상은 상대국과 하는 대외협상과 자국 이해관계자와 하는 대내협상이 있는데, 이 중 대외협상의 경우 한국에서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실에서 주로 담당한다. (Ahn, Se-young, 2019) 모든 통상협상은 사전 단계, 본협상 단계, 서명 및 비준 단계, 실행단계로 실행된다.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한국의 경우 '통상'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쓰기 전에는 통상정책의 단기 목표를 'FTA'라는 용어로 한정하여 한시적 또는 프로젝트(project)성 통상정책을 추진해왔다. (Ko Bo-min, 2015) 이때 자주 사용한 'FTA 협상'이라는 용어는 결국 양자, 지역, 다자 협상을 아우르는 통상협상의 일부이며, 통상협상은 위 정의와 같이 통상정책의 일부이다. (Ko Bo-min, 2017) 마지막으로 통상관리는 통상 분쟁 관리와 무역 및 투자 관리로 나뉜다. 통상 분쟁에는 상대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양자적 분쟁이 있고, WTO에서 다뤄지는 다자적 분쟁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이 부분은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담당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 관리는 통상진흥과 통상협상을 통해 결정된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정책의 홍보, 집행 및 애로사항 점검 등을 포괄한다. 한국의 경우 홍보 및 소통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활용촉진 및 국내 대책 마련과 무역안보 정책 관련해서는 무역투자실에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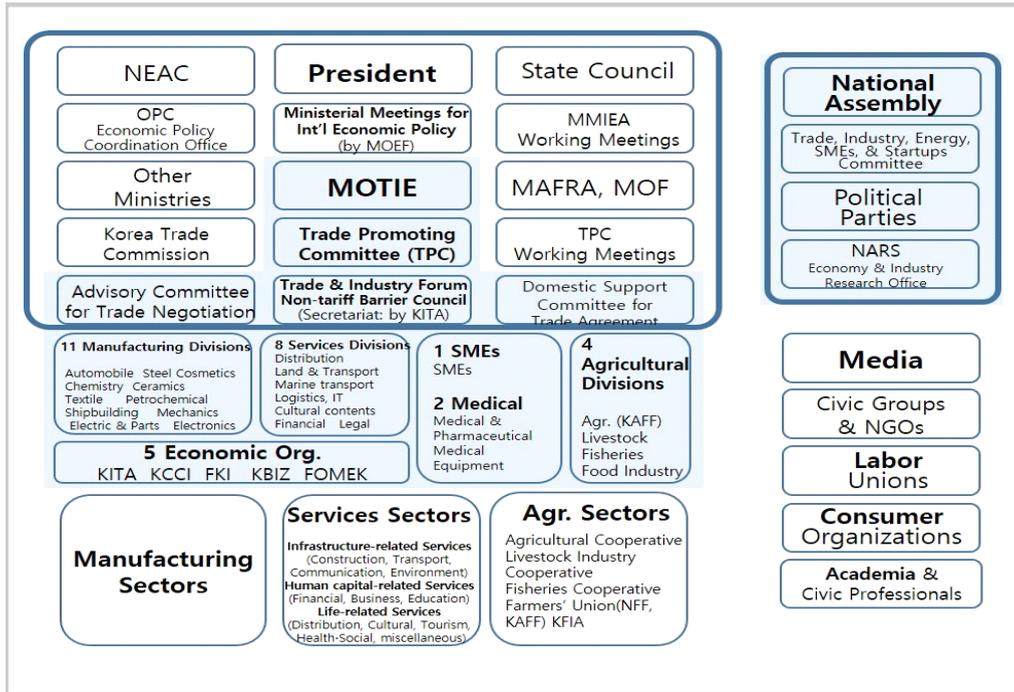
한국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란 한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에 존재하는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는 그 수와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 (Kaukab, 2010; Ko, Bo-min, 2017) (Figure 1)을 보면 통상 관련 행정부 내 주요 주체는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이다. 2020년 10월 현재 통상교섭본부에는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 무역투자실 등 3개실이 있다.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장은 통상산업포럼과 비관세장벽협의회가 있으며, 이 둘은 모두 부처 외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를 그 사무국으로 한다. 한편 가장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는 국회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국회의원 30명)가 가장 중요하다. 그 외에도 노동자 및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학계 및 민간전문가, 그리고 언론이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다. (Ko Bo-min, 2017) 이렇게 한국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들은 관, 산, 학, 민이라는 네 가지 분야로 존재하며, 통상교섭본부라는 네트워크 행정 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AO)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구조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한다. (Ko Bo-min, 2019)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 그중에서도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다양한 한국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 중 통상부처와 입법부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텍스트(text) 분석에 관한 것이다. 산업부는 통상정책을 생산, 집행 및 사후관리는 하는 정책 공급자로서의 통상 이해관계자라면 일반 국민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된 정책수요자이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행정부 및 다른 주요 통상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행정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입법부인 국회간의 통상 관련 정책 의사소통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제통상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두 주체의 상호작용 및 소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적, 제도적 활동은 국정감사이므로, 본 연구는 국정감사 관련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 문서인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이후 시결 보고서)

Fig. 1. Korea's Domestic Trade Stakeholder - a Summary



Note: list of abbreviations -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OPC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MOEF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MIEA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 Ministerial Meeting on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OF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ITA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CCI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KAFF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NFF (전국농민회총연맹; National Farmer's Federation), KFIA (한국식품산업협회;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NARS (국회 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ource: Ko,Bo-min(2017) updated and translated

에 주목하였다. (Lee Dong-joon, 2016 and the National Assembly (website)) 특히 국정감사 대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통상행정이 자리 잡게 된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즉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총 7년 동안 생산된 총 7개의 산업부 부처 관련 시결 보고서 내 주요 주제 키워드 출현빈도 등을 TNA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Ko

Bo-min, 2018)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해당 연도 다음 해에 최종 생산되는 이 시결 보고서는 해당 부처 관련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상호작용의 문서적 증거이자 두 주체 간의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제도적 보고서 중의 하나이다. (Lee Dong-joon, 2016)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 관련 시결 보고서 내용 중에 산업부가 담당하는 산업 정책, 에너지 정

책은 제외하고 통상정책 관련 국회의 요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연구목적에 타당한 텍스트 주제 분석이 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연구 대상 측면에서 통상 분야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관련 연구와 연구 방법 측면에서 통상이나 정책 이해관계자 관련 주제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TNA)을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 통상 이해관계자 관련 연구는 더욱 더 세부적으로 통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의 행정부 및 입법부 관계 관련 일반적인 문헌과 이 두 주체 간의 소통 또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헌으로 나뉜다.

1. 통상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관련 문헌

한국의 통상정책 종류 중 하나인 통상협상 이해관계자는 크게 직접 협상을 담당하는 행정부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와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다. (Ko Bo-min, 2017) 한국 통상협상 내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행정부 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이다. 그리고 통상협상 외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이다. (Ko Bo-min, 2017) 산업부는 통상정책을 생산, 집행 및 사후관리 하는 정책 공급자로서의 통상 이해관계자라면 일반 국민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된 정책수요자이며, 국회는 이들 사이에서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행정부 및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와 소통 및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Fordham and McKeown, 2003) 통상 이해관계자로서의 입법부 역할은 통상진흥, 통상협상, 통상관리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존재한다.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입법부는 그 특성상 여론과 언론으로 상징되는 일반 국민과 기업 및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 및 소비자계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대변한다. (Park, Chang-hyun, 2008) 기업 및 산업계는 통상 진흥과 협상, 관리 등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및 외국 시장에 관계 결정된 각종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Kang Yoo-duk, 2012) 한편 노동계 입장에서는 통상은 생계이자 일자리 문제이며, 소비자에게 통상은 거래되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의 가격변동과 그 다양성 증감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으로 통칭하는 입체적이며 다차원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통상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혹은 소통은 다양한 차원에서 상시 또는 임시로 행해진다. (Kang Yoo-duk, 2012) 특히 통상 분야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간의 소통, 상호작용은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것에 비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높다. (Ciuriak, 2004) 통상정책은 통상 진흥, 통상협상, 그리고 통상관리 차원 모두에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체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정책은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Abazi and Adriaensen, 2017; Jančić, 2017) 한국의 통상정책은 비록 대통령 및 행정부 중심이나 이를 위한 입법부의 균형과 견제가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 국내 통상 분야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의 FTA협상 10년을 정리하며,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 중 정부 담당 부처 내부의 각종 의사소통 과정과 단계별 이해관계 주체 담당 기관 및 회의체들을 소개하고, 산업계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 내 국내 대책 관련 부서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Meong Jin-ho, 2014) 또한 한국의 선진 통상 국가 비전(vision)에 맞는 통상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Ko Bo-min, 2015)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통

상입법에 대한 관심과 역량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통상 분야' 입법정책 연구 지원 시스템을 보강하여 경제산업조사실 내 통상담당 연구를 추가한 부서(가칭 '산업통상지원팀')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상행정 차원에서도 그 당시 제2차 관실 FTA 교섭실 내 'FTA 이행과'를 격상시켜 가칭 'FTA 이행관'으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는 등 'FTA 교섭' 중심에서 이행과 후속 조치를 보강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상정책 생산 및 집행에 있어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과 민간 간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Je Hyun-jung, 2016).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모델' 응용하여 국내 통상협상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관리, 및 갈등 통제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Ko Bo-min, 2017) 이 연구를 통해 통상협상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식별 및 체계화되었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산업계와 국회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노동자, 언론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s)들을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관련 분석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통상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통상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두 통상정책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일정 기간 벌어진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집행 관련하여 그 비중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 주체 간 의사소통의 결과가 어떻게 국제통상학적으로 요약 및 분류될 수 있고, 각 소통 시기 간에 산출된 요구사항, 결과 보고, 추진계획 등의 정책 정보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국정감사 관련된 연구로는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4개국에 대한 국방정책 관련 국정감사 질문 비교 분석 연구는 존재한다. (Rozenberg et al, 2011)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문들이 각 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설에 대한

계량 분석을 한 연구도 존재한다. (Otjes and Louwerse, 2018) 하지만 통상 분야 국정감사 내용을 통상 이해관계자 간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증거 자료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아직 없다. 특히 한국 통상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에 대한 텍스트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본고는 시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통상 이해관계자 관련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 방법론 문헌

연구방법 측면에서 정책 이해관계자 관련 주제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한 연구로서 통상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관련 문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헌은 없다. 한편 통상 관련 주제 문헌으로는 기술표준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의 표준화 법률에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국가의 표준화 거버넌스 구성형태, 주요 행위자 및 관계, 표준화 절차에서 거버넌스 주체 간 역할과 협력수준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존재한다. (Baek Jong-hyun, 2014)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산업(공업) 표준화 관련 법률에서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표준심의회 간의 부처-정부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주무 부처와 공업(산업) 표준조사회 간의 민-관 위원회 관계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처와 기관-단체 간 거버넌스 관계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부-공공단체-민간단체들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다층적 거버넌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부-공공단체 중심의 이원적 거버넌스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국가표준화 관련 법률에서 한국은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국가표준심의회' 간의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중앙부처-지방정부-기업 간의 분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처와 기관-단체 간 거버넌스 관계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부-표

Table 1. Literature Review

Trade Stakeholder	Literatures	Main points
Interaction -related	Park, Chang-hyun(2008)	- Research 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trade negotiation including parliamentary ratification process
	Kang, Yoo-duk (2012)	- Research on the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EU trade policy making procedure, particularly Korea-EU FTA
	Meong, Jin-ho (2014)	- Research on Korea' s 10 years of its FTA history concerning process for and interactions between trade stakeholders in Korea
	Je Hyun-jung (2016)	- Research on public-private in trade policy making including Korea' s case
	Ko, Bo-min (2017)	- Research on the stakeholder analysis on Korea' s trade negotiations using 'Project Stakeholder Management Model'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 Research on parliamentary scrutiny of trade policies across the western world
Parliamentary Inspection-related	Rozenberg et al (2011)	- Research on parliamentary oral questions concerning defence policies in Germany, UK, Spain and Japan
	Otjes and Louwerse (2018)	Research on parliamentary oral questions as strategic party tools in Netherlands
TNA-related	Baek Jong-hyun (2014)	Text network-base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standardization(TBT) governance of Korea, China, and Japan
	Jang Im-sook and Yu-seok Moon (2019)	Social Network Analysis(SNA) of communication structure in Korea Forest Service

Source: Author' s analysis

준화 기구 중심의 단순한 계층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기업-민간단체 간의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TNA 방법론을 가진 선행연구는 타 분야인 지방행정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지방행정 연구 분야에서는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내부소통 실태와 소통 네트워크를 진단·분석하여 현 소통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소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Jang Im-sook and Yu-seok Moon, 2019) 하지만 이는 SNA 방법론 중 본 연구가 수행한 종류의 TNA 방법론은 아니며, 통상 분야가 아닌 한 정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통 및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정보공개 이슈

Table 2. Trade-related Key-words by Categories for Text Network Analysis

Categories	Subjects
통상 (trade)	보호주의(Protectionism), 무역분쟁(trade disputes), 무역전쟁(trade war),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WTO, FTA, 관세(tariff), 관세화(tariffication), 협상(negotiation), 교역(trade), 전략물자(strategic material/goods), 수출규제(export regulation), 수입규제(import regulation),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무역관(trade booth), 외국(foreign), 외국인(foreigner), 외국기관(foreign institution), 외국기업(foreign company), 무역수지(trade balance),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정상회담(summit),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무역 (commerce)	투자(investment), 투자유치 (inviting investment), FDI, 외투법인(foreign-invested company), 유턴기업(U-turn company), 무역 사기(trade fraud), 국제가격(international price), 수출(export), 수입(import), 직수입(direct import), 수출입(export&import), 수출업자(exporter), 수입업자(importer), 수입차(imported automobile), 수출다변화(export diversification)
국제 (international)	국제표준, 국제기준(- standards), 국제경쟁력(-competitiveness)
해외 (overseas)	해외시장(-market), 해외출장(-business trip), 해외진출(-expansion), 해외자원(-resources), 해외채권(-bond), 해외스타트업(-start-up), 해외 M&A, 해외유출, 국외유출(-outflow), 해외기관(-institution)
세계 (global)	세계시장(global market, world market)
국가들 (countries) 지역들 (regions)	미중(US-China), 한중(Korea-China), 한중일(Korea-China-Japan), 동북아(Northeast Asian), 동아시아(East Asia), 북방(Northern), 미국(US), 중국(China), 일본(Japan), 이란(Iran), 러시아(Russia), EU, 파나마(Panama), 후쿠시마(Fukushima), 남북경협(South-North Korean economic partnership), 북한(North Korea), 개성공단(Gaeseong Industrial Complex)
원산지 (rules of origin)	자국산(domestic origin), 외국산(foreign origin), 국산, 국산화(made in Korea) 개발도상국, 개도국(developing country), 선진국(developed country) 일본산, 일본계(Japanese origin), 중국산(chinese origin), 인도산(Indian origin)
외래어 (foreign languages)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IKEA, OECD,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 바이코리아(Buy Korea), 코트라(KOTRA), K-Move

Source: Author's analysis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 확인에 그 목적을 둔 연구가 존재한다. (Choi Sun-hang, 2018) 이 연구는 학력 정보공개 이슈를 중심으로 전국 10대 일간지 신문 기사에 상호작용이 드러난 행위자를 모두 주요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였다. 학력 정보공개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 중 이해관계자, 자원, 권력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최종 통합성 차원을 분석하였으며, Mendelow(1991)의 이해관계자 그룹별 사용 전략을 적용하여 이해 관계자 그룹 간의 소통을 확인하였고, 이해관계자중심

경영론 (Stakeholder Management Theory)적 접근을 통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TNA의 기초 자료로 언론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역시 통상 분야가 아닌 타 분야 이해관계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통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상 이해관계자 중 정부와 부처와의 상호작용을 국경감사 시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TNA 방법론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Ⅲ. 연구방법론과 분석자료

1. 연구모형 소개

본 연구는 통상 이해관계자 중 통상 담당부처인 산업부와 입법부인 국회와의 상호작용 내용 분석을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사이람(Cyram)사의 넷마이어(NetMi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넷마이어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과 관련한 분석 모델과 시각화 기법을 구현하는 모델인데, 특히 문헌 정보 네트워크 분석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Ki-Young Kwahk, 2017) 이는 수많은 문헌들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한 중요 단어 및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유용하다. 즉, 여러 종류의 문서 데이터에서 TNA 기법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세부 토픽을 분석할 수 있고 복잡한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데이터로 재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된 이후인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총 7개년도, 총 7개의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상 통상 관련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 ‘통상 관련’이라 함은 전체 산업부 소관 국정감사 기관¹⁾ 전체 중 특히 3대 기관, 즉 산업부 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 본부 관련 내용

중에서 (Table 2)와 같이 저자의 통상 관련 주제어 선택을 기준으로 전체 내용 중 통상 내용만을 추려서 따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통상, 무역, 국제, 해외, 세계 등의 단어가 들어간 요구사항 내용만을 별도로 ‘통상 관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NA 기법 중 특히 주제 분석 또는 토픽 분석 기법을 도입하였다. 주제 분석 (또는 토픽 분석; Topic Modelling)이란 “SNA의 2-모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문서 데이터에 내재된 주제를 파악하여 문서를 분류하거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클러스터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Cyram (webpage)) 이는 다시 말하면 대량의 문서 집합으로부터 주제를 자동으로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집단화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주제분석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 기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포함될 주제 수는 5개, 주제에 들어갈 단어의 수도 5개로 설정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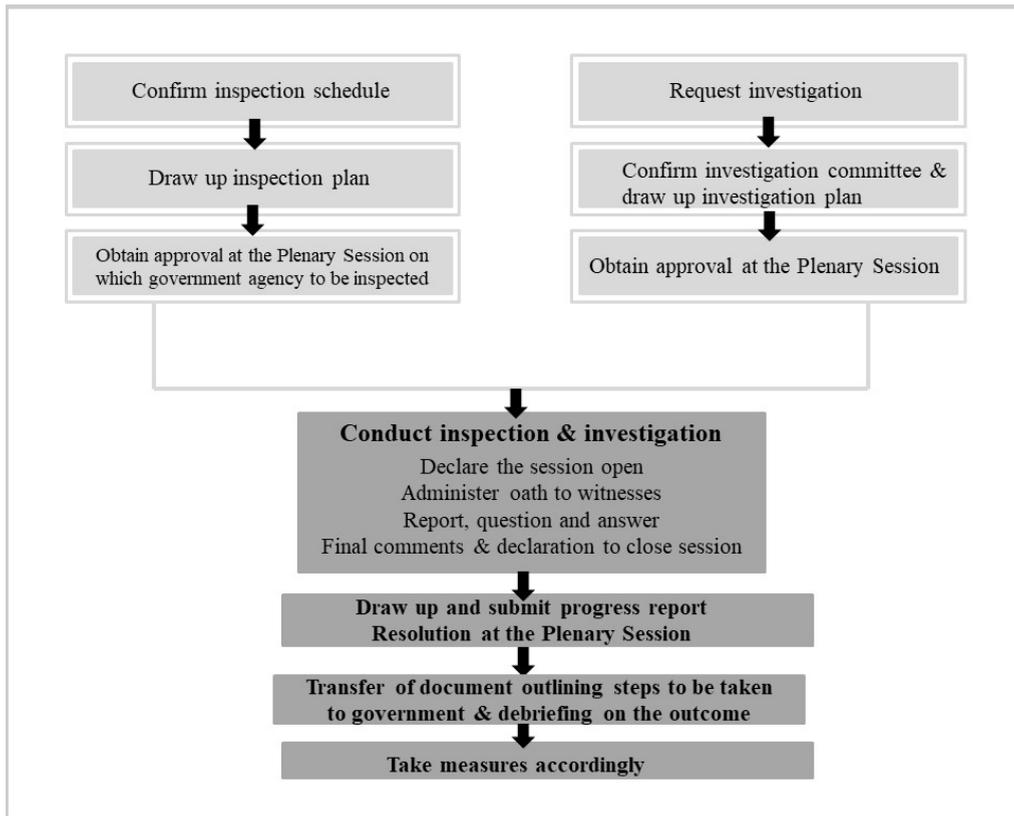
2. 자료 수집과 기초 통계

본 연구는 행정부 내 통상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입법부인 국회와의 상호작용의 증거인 문서 또는 텍스트(text) 중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에 대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 방법론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는 3권 분립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 역할이 입법 기능과 더불어 국정 정보의 수집과 공개, 정치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토론과 해결, 행정

1) 2019년도 기준 전체 기관은 위에 언급한 3대 기관을 포함하여 특허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총 27개 기관이다.

2) LDA 모델은 토픽수를 입력 받으면 전체 문서에 토픽을 랜덤으로 할당한 후, 토픽의 재 할당을 반복 수행하여 문서와 단어의 토픽을 찾은 알고리즘이며, 토픽 모델링은 무작위 토픽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렇게 무작위 할당을 진행할 경우 초기 할당 값에 따라서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할당 값을 2, 1, 그리고 반복 회수를 100으로 설정하였다.

Fig. 2. Process for Parliamentary Inspection & Investigation



Source: The National Assembly (webpage: https://korea.assembly.go.kr:447/int/act_03.jsp)

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실제적인 헌법상의 권한이 바로 국정감사권이다. (Lee Dong-joon, 2016)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활동을 통해 국정 현안과 정책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 재정,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 Lee Dong-joon(2016)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Figure 2)와 같이 준비 단계, 실시 단계, 결과 처리 단계 등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국정감사 시기를 결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 승인을 받고, 여러 자료 및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 시 제출하여 채택 받고, 이어 시정 요구사항을 상임 위원회 별로 정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이듬해에 보고 받는다. (Lee Dong-joon, 2016)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정감사 실시 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시결 보고서에는 국정감사 실시 당해 연도에 발생했던 해당 부처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결과 보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각각 모두 자세하게 담겨 있다. 이는 해당 정부 부처와 입법부인 국회 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 결과로서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제도적 문서 중 하나이다. 산업부 관련 시결 보고서에도 특정 연도에 국회가 산업부에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산업부 및 관련 기관의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이 자세히 들어있다. (Table 3) 를 보면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 총 7개

Table 3. Summary Statistics of Requests by the National Assembly to MOTIE

Year	Requests # (%)	MOTIE HQ -related (%)	MOTIE HQ trade-related (%)	KOTRA -related (%)	KSURE -related (%)	Trade -related Total (%)
2013	349 (100%)	73 (21%)	17 (5%)	11 (3%)	10 (3%)	38 (11%)
2014	507 (100%)	89 (18%)	33 (7%)	17 (3%)	12 (2%)	62 (12%)
2015	556 (100%)	131 (24%)	42 (8%)	22 (4%)	21 (4%)	85 (15%)
2016	556 (100%)	153 (28%)	32 (6%)	17 (3%)	20 (4%)	69 (12%)
2017	428 (100%)	142 (33%)	26 (6%)	24 (6%)	12 (3%)	62 (14%)
2018	520 (100%)	195 (38%)	38 (7%)	22 (4%)	13 (3%)	73 (14%)
2019	367 (100%)	150 (41%)	30 (8%)	15 (4%)	10 (3%)	55 (15%)
Total	3,283 (100%)	933 (28%)	218 (7%)	128 (4%)	98 (3%)	444 (14%)

Source: Author's analysis

내에, 산업부 전체 기관 관련 요구사항 개수는 총 3,283이며, 총 7년의 기간에 연평균 469개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부에 대해 2013년-2019년 사이 7년 기간에 연평균 469개를 요구사항 형식으로 각 기관에 전달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결과 보고와 추진계획의 형태로 답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 관련 기관 중 '산업부 본부' 관련 요구사항 개수는 총 933개이며, 총 7년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133개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부 본부에 대해 7년 동안에 연평균 133개를 요구사항 형식으로 각 기관에 전달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결과 보고와 추진계획의 형태로 답한 것이다. 이는 산업부 전체 기준으로는 28%에 해당하는 내용이 산업부 본부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산업부의 3대 정책인 통상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직접 관련 3대 기관(산업부 본부, K-SURE, KOTRA) 전체 요구사항 개수는 총 1,159개이며, 총 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개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부 산하 3

개 기관에 대해 7년 동안에 연평균 166개를 요구사항 형식으로 부처에 전달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결과 보고와 추진계획의 형태로 답한 것이다. 이는 산업부 전체 기준으로는 35%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기관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Table 2>의 통상 주제 키워드 선별을 통해 추려낸 산업부 본부 요구사항 중 통상 관련 요구사항 개수는 총 218개이며, 총 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1개(전체의 7%)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부에 대해 2013년-2019년 사이 7년 동안에 통상 관련 주제를 연평균 31개를 요구사항 형식으로 부처에 전달한 것이고, 이에 대해 부처는 결과 보고와 추진계획의 형태로 답한 것이다. 이는 산업부 전체 기준으로는 7%지만, 산업부 본부 기준으로는 23%에 해당하는 내용이 통상 직접 관련 주제 키워드를 가진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부의 3대 정책 중 하나인 통상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산업부 본부 관련 국정감사 내용 중 23%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본부 요구사항 중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과 나머지 2대 기관(K-SURE, KOTRA) 요구사항 총합계 개수는 총 444개이며, 총 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개의 요구사항

Table 4. Members, Parties, Leaders of Trade-related Committees (19th & 20th)

Period	Total	Committee Leader (party)	SP	LKP	BP	PP	NPAD	DP	DUP	JP	MGPJ	I
1 st half of 19 th	26	Ahn, Hong-joon (SP)	13						11			2
2 nd half of 19 th	29	Kim, Woo-nam (NPAD)	15				13			1		
1 st half of 20 th	30	Chang, Byung-wan (PP)	12			4		12				2
1 st half of 20 th	30	Hong, Il-Pyo (LKP)		11	3			13			2	1

Notes: Each party's name is abbreviated as: Saenuri Party (SP), Liberty Korea Party (LKP), Bareunmirae Party (BP), People's Party (PP),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Democratic Party (DP), Democratic United Party (DUP), Justice Party (JP), Members Group of Peace and Justice (MGPJ), and Independent (I).

Source: The National Assembly (webpage: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

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부 산하 3개 기관에 대해 2013년-2019년 사이 7년 동안에 연평균 63개의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을 부처에 전달했다. 산업부 기관 전체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기관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우선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된 이후인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총 7개년도, 총 7개의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상 통상 관련 키워드 TNA를 시도해 보았다. 우선 3대 기관, 즉 산업부 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다음 <Table 2>와 같은 주제 키워드 분류를 통한 요구사항 선별을 통해 3개 기관에 대한 '통상 직접 관련' 국회 요구사항들을 따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산업부 부처 내 3대 기관 전체 및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 내용 중 어떤 주제 키워드들이 국정감사 및 관련 결과 보고 시에 자주 등장하였는지를 한국어 명사 형식의 주제 단어 형태로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기간 내에 행정부는 2013년-2016년 사이 기간은 보수당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18대) 집권 시기(2013.2-2017.3)였고, 2017년-2019년 사이에는 진보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19대)이 집권 시기(2017.5-2022.5)였다. 통상정책은 입법부의 다수당 성향이 친

시장적(보통 보수)인지 혹은 친노동적(보통 진보)인지에 따라 통상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Conceição-Heldt, E., 2011) <Table 4>를 보면 국회는 연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9대(2012년 5월 - 2016년 5월) 및 20대(2016년 5월 - 2020년 5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19대 국회의 경우 그 당시 보수당이자 집권당(여당)인 새누리당(총 152석)이 다수당이었으며, 20대 국회의 경우는 그 당시 여당이자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이 비록 다수당이긴 했지만, 그 당시 보수적 성향의 야당들인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위에 있던 다수당이였다. 또한 통상 관련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이하 산업통상위원회)는 총 30여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고, 양 기간 모두 보수당 소속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IV.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산업부 내 3대 기관 대상 국정감사 '요구사항' 관련 분석 결과

본 연구는 TNA 방법론 중 주제 분석 기법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산업부 관련 국정감사 대상 기관 중 3대 기관(산업부 본부,

KSURE, KOTRA) 감사 시결 보고서상의 주제 키워드의 출현 빈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3대 기관 관련 요구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주제 모델링을 하였고, 그 이후 <Table 2>와 같은 ‘통상 직접 관련’ 주제 키워드 선별을 통해서, 3개 기관에 대한 ‘통상 직접 관련’ 국회 요구사항들을 따로 분석하였다. LDA 주제 분석 모델링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총 7개의 시결 보고서 각각에 대해 분석 주제 대상 수는 총 5개, 주제 별로 들어갈 단어의 수도 총 5개로 설정하였다. 이 중 다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각 연도 당 상위 2개씩만 추려서 <Table 5>와 <Table 6> 2개의 표로 정리하였다. 주제(Topic) 항목 내 괄호의 수치가 바로 전체 문서(1개의 시결 보고서) 내의 해당 주제 빈도수인데, 한 해당 5개의 주제어 중 이 숫자가 클수록 그해 문서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상에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도 모두 담겨 있으나, 먼저 위 두 가지 분야 문서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나서 다음 부분에서 해당 기간의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 주제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다.

1)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사항(전체) 주제 분석 결과

<Table 3>를 보면 통상 직접 관련 3대 기관(산업부 본부, K-SURE, KOTRA) ‘전체’ 요구사항 개수는 총 1,159개이며, 총 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개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산업부 전체 기준으로는 35%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기관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Table 5>를 보면 우선 2013년도에는 산업부의 전통적인 정책 분야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기업, 기술, 기관, 확대 등의 주제어가 눈에 띄고, 요구사항 내용답게 관련, 방안, 산하, 마련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는 사업, 가스, 기술, 실적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사업, 산업, 자원, 개발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상 직접 관련’이 아닌 3개 기관 ‘전체’ 요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는 주제어가 다 출현 빈도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2016년도에는 사업, 기관, 산업, 정책, 에너지, 제도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해외’라는 통상 관련 주제어도 처음 나왔다. 2017년도에는 사업, 자원, 에너지, 자원, 발전, 재생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해외’도 2016년에 이어 다시 등장하여, 산업부 관련 정책 주제 중 외국과 연관된 부분이 더욱 중요해 짐을 보여준다. 2018년도에는 산업, 기업, 기관, 사업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기업, 지원, 확대, 방안, 대책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역시 ‘해외’, ‘투자’ 같은 주제어도 다 출현 빈도 단어로 등장했다. 해당 기간 3대 기관 ‘전체’ 요구사항 내용답게 관련, 방안, 검토, 마련, 대책, 지원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사항(통상 관련) 주제 분석 결과

<Table 3>를 보면 산업부 본부 요구사항 중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과 나머지 2대 기관(K-SURE, KOTRA) 요구사항 총합계 개수는 총 444개이며, 총 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개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산업부에 전달했다. 즉, 산업부 기관 전체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기관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Table 6>’을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부가 중요시하는 기업, 산업, 관리, 개발 등의 눈에 띄는 가운데, 요구사항 내용답게 관련, 방안, 지원, 마련, 확대, 대응, 검토, 개선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수출, 보험 등의 주제어가, 2014년도에는 통상, 개발, 전문, 실적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투자, 해외, 개발 등의 주제어가, 2016년도에는 무역, 투자, 경제, 보험, 문제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인 통상 관련 주제어들을 담고 있다. 2017년도에는 수출, 적극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수출, 적극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able 5. Topic Analysis I (Requests for the 3 Entities - total, 2013-19)

Year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2013	Topic-3 (26)	관련(related)	방안(plan)	기관(institute)	산하(affiliated)	마련(preparation)
	Topic-5 (24)	지원(support)	마련(preparation)	기업(enterprise)	기술(technology)	확대(enlargement)
2014	Topic-2 (28)	방안(planning)	기술(technology)	마련(preparation)	개선(improvement)	실적(performance)
	Topic-4 (33)	검토(review)	관련(related)	사업(business)	관리(management)	가스(gas)
	Topic-1 (45)	사업(business)	산업(industry)	자원(resource)	개발(development)	관리(management)
2015	Topic-2 (40)	마련(preparation)	대책(measure)	투자(investment)	개선(improvement)	수출(export)
	Topic-4 (42)	마련(preparation)	산업(industry)	정책(policy)	에너지(energy)	제도(institution)
2016	Topic-5 (44)	사업(business)	지원(support)	기관(institute)	해외(overseas)	관련(related)
	Topic-1 (46)	사업(business)	지원(support)	해외(overseas)	강화(reinforcement)	자원(resource)
2017	Topic-3 (39)	에너지(energy)	발전(advancement)	검토(review)	재생(regeneration)	신(new)
	Topic-4 (38)	마련(preparation)	방안(plan)	대책(measure)	시장(market)	지역(region)
2018	Topic-1 (57)	마련(preparation)	방안(plan)	지원(support)	개선(improvement)	문제(problem)
	Topic-5 (54)	산업(industry)	기업(enterprise)	기관(institute)	사업(business)	노력(effort)
2019	Topic-1 (46)	방안(plan)	마련(preparation)	기업(enterprise)	지원(support)	확대(enlargement)
	Topic-3 (55)	관련(relation)	마련(preparation)	대책(measure)	해외(overseas)	투자(investment)

Source: Author's analysis

Table 6. Topic Analysis II (Requests for the 3 Entities - trade-related, 2013-19)

Year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2013	Topic-3 (14)	방안(plan)	마련(preparation)	지원(support)	확대(enlargement)	기업(enterprise)
2014	Topic-5 (10)	마련(preparation)	방안(plan)	보험(insurance)	대책(measure)	수출(export)
	Topic-4 (22)	마련(preparation)	방안(plan)	실적(performance)	지원(support)	전문(expertise)
2015	Topic-5 (16)	해외(oversea)	자원(resource)	통상(trade)	개발(development)	산업(industry)
	Topic-2 (21)	투자(investment)	자원(resource)	해외(overseas)	관리(management)	개발(development)
2016	Topic-4 (24)	관련(related)	마련(preparation)	강화(reinforcement)	지원(support)	개선(improvement)
2017	Topic-3 (19)	문제(problem)	대응(manuever)	투자(investment)	방안(measure)	마련(preparation)
	Topic-5 (17)	보험(insurance)	검토(review)	무역(commerce)	경제(economy)	방안(plan)
2018	Topic-1 (16)	관련(related)	산업(industry)	마련(preparation)	확대(enlargement)	개선(improvement)
	Topic-3 (17)	지원(support)	수출(export)	적극(active)	방안(plan)	관리(management)
	Topic-1 (23)	기업(enterprise)	강화(reinforcement)	국내(domestic)	수출(export)	관리(management)
2019	Topic-3 (23)	확대(enlargement)	해외(overseas)	관련(relation)	관리(management)	방안(plan)
	Topic-5 (25)	마련(preparation)	방안(plan)	수출(export)	기업(enterprise)	사업(business)

Source: Author's analysis

2019년도에는 국내, 수출, 해외, 강화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피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내 요구사항 주제 내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Topic Analysis III (Action Reports by the 3 Entities – trade-related, 2013-19)

Year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2013	Topic-2 (8)	해외(overseas)	개선(improvement)	방안(plan)	개발(development)	융자(loan)
	Topic-3 (8)	통상(trade)	산업(industry)	기관(institute)	관련(related)	전문(expertise)
	Topic-5 (9)	기업(enterprise)	수출(export)	지원(support)	사업(business)	사(private)
2014	Topic-1 (16)	지원(support)	중소 (small & medium-sized)	중견(mid-sized)	기업(enterprise)	보험(insurance)
	Topic-3 (15)	산업(industry)	협의(consultation)	전문(expertise)	부(department)	기준(standard)
2015	Topic-4 (21)	강화(reinforcement)	기관(institute)	심사(evaluation)	전문(expertise)	실적(performance)
	Topic-5 (20)	수출(export)	지원(support)	기업(enterprise)	사업(business)	대응(response)
	Topic-1 (14)	실시(implementation)	강화(reinforcement)	채권(bond)	수출(export)	체결(conclusion)
2016	Topic-3 (18)	추진(drive)	지원(support)	투자(investment)	제도(institution)	구조(structure)
	Topic-5 (14)	기업(enterprise)	지원(support)	수출(export)	해외(overseas)	확대(enlargement)
	Topic-1 (16)	경제(economy)	원전(nuclear facility)	개발(development)	장관(minister)	협력(cooperation)
2017	Topic-5 (16)	기업(enterprise)	수출(export)	지원(support)	대상(object)	조사(investigation)
	Topic-2 (23)	강화(consolidate)	수출(export)	확대(enlargement)	추진(drive)	산업(industry)
	Topic-4 (18)	역관(official)	기준(standard)	조치(action)	운영(operation)	효율(efficiency)
2018	Topic-1 (13)	협상(negotiation)	운영(operation)	대응(response)	전자(electricity)	대책(measure)
	Topic-2 (15)	지원(support)	기업(enterprise)	투자(investment)	수출(export)	유치(attract)
	Topic-3 (13)	사업(business)	기업(enterprise)	산업(industry)	확대(enlargement)	추진(drive)

Source: Author's analysis

Table 8. Topic Analysis IV (Plan Reports by the 3 Entities – trade-related, 2013-19)

Year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2013	Topic-4 (9)	기업(enterprise)	수출(export)	지원(support)	전략(strategy)	서비스(service)
	Topic-5 (10)	관리(management)	지속(lasting)	전문(expertise)	회수(collection)	채권(bond)
2014	Topic-4 (21)	예정(expected)	지속(lasting)	관련(related)	분기(quarter)	협상(negotiation)
	Topic-5 (12)	지원(support)	강화(reinforcement)	기관(institute)	해외(overseas)	확대(enlargement)
2015	Topic-2 (14)	추진(drive)	관리(management)	체계(system)	개최(holding)	강화(reinforcement)
	Topic-5 (14)	정부(government)	관련(relation)	계획(schedule)	방안(plan)	투자(investment)
	Topic-1 (13)	투자(investment)	산업(industry)	개최(holding)	계획(schedule)	유치(inviting)
2016	Topic-2 (13)	지원(support)	강화(reinforcement)	기업(enterprise)	기관(institute)	기술(technology)
	Topic-5 (14)	예정(expected)	개선(improvement)	지속(lasting)	전문(speciality)	제도(scheme)
2017	Topic-2 (16)	사업(business)	추진(drive)	지속(lasting)	예정(expected)	관련(relation)
	Topic-5 (12)	지원(support)	기업(enterprise)	수출(export)	중국(China)	지속(lasting)
2018	Topic-4 (22)	지속(lasting)	노력(effort)	관리(management)	개선(improvement)	이행(performance)
	Topic-5 (16)	기업(enterprise)	강화(reinforcement)	수출(export)	서비스(service)	홍보(promotion)
2019	Topic-3 (12)	지원(support)	해외(overseas)	기관(institute)	확대(enlargement)	회수(collection)
	Topic-5 (12)	노력(effort)	경찰청(police agency)	기업(enterprise)	무역(commerce)	투자(investment)

Source: Author's analysis

2. 산업부 내 3대 기관 대상 국정감사 '통상 관련' 사항 분석 결과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상에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도 모두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기관에 대한 '통상 직접 관련' 국회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 내용 들도 <Table 7>과 <Table 8>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각 연도별 국정감사 부처 결과 보고 주제 분석 결과

<Table 3>를 보면 산업부 기관 전체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기관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회에 결과 보고를 하였고, 이 내용도 시결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Table 7>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부가 중요시하는 주제 키워드인 기업, 산업, 사업, 관리, 개발 등의 역시 눈에 띄는 가운데, 결과 보고 내용답게 관련, 개선, 방안, 지원, 마련, 대응, 조치, 강화, 대책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통상, 수출, 해외, 전문, 융자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는 중견, 중소기업, 전문, 보험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수출, 전문, 실적, 심사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수출, 해외, 채권, 체결, 강화, 확대, 추진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요구사항 분석 결과처럼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상 관련 주제어들을 담고 있다. 2017년도에는 수출, 경제, 협력, 조사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수출, 효율, 운영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수출, 투자, 유치, 전자 등의 주제어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협상'이라는 통상 관련 주제어도 다 출현 빈도 주제어로 파악이 되었다.

2) 각 연도별 국정감사 부처 추진계획 주제 분석 결과

3개 기관 '통상 직접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산업부는 결과 보고에 더하여 추진계획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도 시결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Table 8>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부가 중요시하는 기업, 산업, 사업, 관리, 개발 등의 눈에 띄는 가운데, 추진 계획 내용답게 예정, 추진, 이행, 관련, 방안, 지원, 마련, 확대, 대응, 검토, 지속, 관리, 강화, 계획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수출, 서비스, 회수, 채권, 전문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는 해외, 협상, 예정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투자, 정부, 체계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투자, 개최, 전문, 유치, 기술, 제도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인 통상 관련 주제어들을 담고 있다. 2017년도에는 수출 단어 외에도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명이 높은 빈도를 가진 주제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2018년도에는 수출, 서비스, 홍보, 노력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해외, 무역, 투자, 확대, 회수, 노력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3. 2019년도 국정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사례 분석

이제까지 산업부 내 3대 기관 국정감사 결과인 요구사항, 결과 보고, 향후 계획 중 전체 및 통상 직접 관련 내용들에 대한 주제 분석을 해보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주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통상 직접 관련 시결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어 관련 사례 분석을 해보았다. 국정감사 요구사항 주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국내, 수출, 해외, 강화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도에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피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내 요구사항 주제 내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순위 주

제어로 ‘분쟁’이라는 통상 관련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벌어지는 통상 관련 분쟁에 대한 주제도 국정감사 내용 다 출현 빈도 주제로 처음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 주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투자, 유치, 전자 등의 주제가 뿐만 아니라 ‘협상’이라는 통상 관련 주제어도 다 출현 빈도 주제어로 파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추진계획 주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 무역, 투자, 확대, 회수, 노력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우선 ‘수출’, ‘투자’, ‘해외’ 등의 주제어와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Table 9>에서 요구사항 51-2번은 “시장 개척과 수출 목적의 해외 진출이 있으므로,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유턴 기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부처에서는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서 유턴 기업에 대해 단순 평가 시 가점만 적용 한 부분을 아예 지원 한도 상향으로 조정했고,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신규로 가점 부여(‘20.5월)를 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 개선했으며, 향후 이를 기업에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요구사항 54-2번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하여 지방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처는 이에 대해 지방에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국비 지원 비율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해외투자 유입과 관련하여 요구사항 145번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특구 간 통합 및 특화 논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부처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방향을 ‘개발 및 투자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제구역의 정체성 특화(‘18.11월 제2차 기본계획)”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개편된 운영 방향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지역 지정(‘19년 12월), 실질적인 투자 여건 확보” 등을 통해 실제 투자 잠재

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6월) 및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7월)”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 54-1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하여 지방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관한 결과는 “인센티브 국비 지원 비율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 인센티브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이 제시되었다.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주제인데 같은 해 시결 보고서 내 목차 상으로는 그 세부 주제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반면 국정감사 내용에는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국내 유입에 대해 환영하는 기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Table 9>의 요구사항 54-2번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 투자위원회 역할 및 산단 임대료 관리를 강화할 것”이 있다. 이 사항에 관한 결과 보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20.2.4 공포)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 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 (국방부·국정원·방사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함”,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단지 입주 시 외국인 투자 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19.12) - 외국인 투자 금액 3천만 불 또는 입주면적 4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단지 관리기관에 실태조사 및 산단 관리 강화 요청(‘20.5)”이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 제도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안전검토 강화로 국내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촉진”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내’ 주제어를 포함한 국내 산업 보호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요구사항 51-2번 사항인 “유턴 기업 성과 미흡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장 개척과 수출 목적의 해외 진출이 있으므로,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유턴 기업을 지원할 것”

Table 9. Major Trade-related Cases of Action and Plans Reports in 2019

Key-word	Requests (2019)	Actions & Plans (2019)
Export (Trade) Overseas	51-2. In order to develop the market and advance into overseas for export purposes, it is required to support U-turn companies, focusing on industries that use advanced technology or whose proximity to consumers is important. (시장 개척과 수출 목적의 해외진출이 있으므로,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을 지원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시정 및 처리결과): Improved the support system in a way that helps with productivity and higher value-added businesses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 * Ex) Increased the support limit for U-turn companies in the 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March 2020, only additional points were given in the previous evaluation criteria), and gave additional points for participating in R&D by the MOTIE (May 2020).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유턴기업 지원한도 상향('20.3월, 기존에는 평가 시 가점만 존재), 산업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20.5월) 등 제도개선> □ Plans(향후 추진계획): to encourage companies to use the system (기업에 제도 활용 적극 권장)
Investment	54-2. In order to prepare for a de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o ease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various measures are needed, such as raising the ratio of state funding for local investment incentives.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하여 지방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시정 및 처리결과): Currently, discussing with the MOEF how to raise the support rate for incentives (인센티브 국비 지원 비율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 □ Plan(향후 추진계획):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 인센티브 국비 지원 비율 상향 (To increase the rate of cash suppor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tate funding for incentives)
Trade dispute	53-1. To analyze the cause of losing the first case of the Korea-Japan fisheries dispute (한일 수산물 분쟁 1차 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시정 및 처리결과): Completed a white paper to analyze the cause of losing the first case of the Korea-Japan fisheries dispute (January 2020)<한일 수산물 분쟁 1차 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위한 백서 작성 완료('20.1월)> □ Plans(향후 추진계획):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more thorough response strategy based on white papers in case of similar disputes in the future.(추후 유사한 분쟁 발생시 백서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노력)
Negotiation	55-1. To improve the MOTIE's ability to negotiate trade deals ((산업부의 통상 협상 능력을 배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시정 및 처리결과): Achieved the results of the conclusion and effectuation of five FTAs in 2019, as a result of holding meetings of experts in the industry, workshops in departments, and meetings with related ministries from time to time to gather opinions, discus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negotiations, and take into account various opinions (업계-전문가 간담회, 부내 워크숍,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협상 대응전략 논의 및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협상을 추진, '19년 5건의 FTA 타결·발효 성과 도출 - Signed(타결,4): K:UK FTA, K:Israel FTA, K:Indonesia CEPA, RCEP & Ratified(발효,1): K:Central America FTA □ Plan(향후 추진계획): Continuing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rade negotiations by analyzing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and trends in upgrading trade norms (통상환경 변화, 통상규범 업그레이드 동향 분석을 통한 통상협상 능력 강화 지속)
WTO	146. Necessary to devise regular organizational measures to prepare for trade disputes, since the WTO team of MOTIE is temporarily in operation ((산업부 WTO 담당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무역 분쟁 대비를 위한 상시조직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시정 및 처리결과): Decided to extend the term of the New Trade Order Strategy Office by two years (March 2022) instead of making it a standing organizatio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respond to trade disputes by one person (March 2020), as a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MOIS on making the New Trade Order Strategy Office a standing organization(due to expire in March 2020) <한시조직('20.3월 만료예정)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상시조직화를 위한 관련 협의를 행안부와 진행한 결과, 상시조직화 대신 실 존속기한을 2년 연장('22.3월)키로 하면서 통상분쟁대응 인력은 1명 증원키로 결정('20.3월)> □ Plans(향후 추진계획): To devise measures to reinforce organization and manpower from time to time in preparation for trade disputes (통상분쟁 등에 대비, 조직/인력 보강 방안 수시로 강구)

Source: The National Assembly (webpage)

과 52-1번인 “철강·금속 등 상대적으로 국내 취약 산업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수입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들 수 있다. 이 중 51-2번 항목의 결과보고에는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이 보고 되었으며 그 예시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서 유턴 기업 지원 한도 상향(20.3월, 기존에는 평가 시 가점만 존재), 산업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20.5월) 등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기업에 제도 활용 적극 권장”한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52-1번 항목의 결과 보고에는 “국내기업의 무역 규제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수행”을 했는데, 특히 2019년도 “우리 기업의 조사 신청 건수는 반덤핑 7건, 불공정무역행위 13건, 총 2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1년 반덤핑 5건, 불공정무역행위 10건, 총 15건)”, “예비관정 시 긍정 관정인 경우 잠정 관세 원칙적 적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확대(주요 3년 → 5년)”, “무역규제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총 43회)”가 제시되었다. 특히 관련 홍보활동이 지역별, 업종별 간담회, FTA 활용 설명회, 중소기업 뉴스 지면 및 주요 세관 대상 설명회 등을 이용한다고 소개 하였는데, 정부의 통상정책의 홍보 매체 및 행사가 다양화되어 있지만, 반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다.

편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무역규제조치의 실효성 강화 및 중소기업 설명회,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등 무역규제제도의 홍보활동 확대”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쟁’, ‘협상’ 관련 주제를 가진 국정감사 요구사항 역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요구사항 53-1번은 “한일 수산물 분쟁 1차 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는 “한일 수산물 분쟁 1차 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위한 백서 작성 완료(20.1월)”를 하였지만, 현재 3급 기밀로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밝힌 “추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백서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기밀 열람 권한을 소유한 통상 이해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 요구사항 55-1번을 보면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산업부의 통상협상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관한 결과 보고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부내 워크숍, 관계부처 대책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협상 대응 전략 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협상을 추진, “19년 5건의 FTA 타결·발효 성과 도출”이라고 보고되었다. 한편 추진계획으로는 “통상환경 변화, 통상규범 업그레이드 동향 분석을 통한 통상협상 능력 강화 지속”으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조직 운영에서는 요구사항 146번에 “산업부 WTO 담당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무역 분쟁 대비를 위한 상시 조직화 방안을 강구 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결과 보고를 보면 “한시 조직(20.3월 만료 예정)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상시 조직화를 위한 관련 협의를 행안부와 진행한 결과, 상시 조직화 대신 실 존속 기한을 2년 연장(22.3월)키로 하면서 통상 분쟁 대응 인력은 1명 증원키로 결정(20.3월)”이 보고되었고, 추진계획은 “통상 분쟁 등에 대비, 조직/인력 보강 방안 수시로 강구”로 제시되어, 산업부처 입장에서는 일상화되는 통상 분쟁 대응을 위해 상설 조직보다는 임시적 조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 시사점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내용 중 특히 ‘통상 관련’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부처 결과 보고와 추진계획에 대한 주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 사례 분석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상 주무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 내용이 일정한 국제통상학적 텍스트 분류 체계를 가지고 매년 수집, 관찰, 집계될 경우 이른바 ‘통상정책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상호작용 주체는 물론이고 기타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매년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 결과 문서가 연도별로 체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과소평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같은 통상입법 전문 연구기관에서 국회와 산업부 간 특정 연도에 생산된 요구사항, 결과 보고, 추진계획 등의 통상정책 정보를 매년 주제별,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로 분류 및 체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구축한 통상지원센터 제공 정보 중 '수입 규제 통합 자료실'과 같은 빅데이터 구축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현실화가 가능하다. (KITA (webpage))

두 번째는 입법부의 통상입법 역량 관련 시사점이다. 우선 한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수가 많고 범위가 넓은 통상정책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 주제 영역이 너무 넓다. 이 위원회는 산업 정책, 통상정책, 자원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까지 모두 관장하며, 매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소속 총 30명의 위원이 이 4가지 정책 주제 중 오직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선택한다. 따라서 개방형 통상강국인 한국 관점에서 사소한 결정조차도 개별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통상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 체제와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따라서 이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정책별로 두세 개의 위원회로 세분화되어 각 소속 국회의원들이 예컨대 특정 국정감사 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Kaukab,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내 통상 관련 연구인력 증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내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이 통상정책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 팀이 관장하는 업무는 통상정책은 물론이고 산업 정책, 지역 경제 정책, 외국인 투자 업무까지 포함하며, 현재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단 1명의 박사급 입법조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의 초당파적 입법 연구기관이자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통상정책 담당 인원이 1명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실제 미국 의회 조사국에는 현

재 약 400여 명의 전문가가 일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 미국법, 국내 사회정책, 외교와 국방무역, 정부와 금융, 자원과 과학 산업 등의 5개 분야로 나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미국이 기관의 통상관련 입법연구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면 한국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다양한 한국 국내 통상 이해관계자 중 통상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입법부인 국회 간의 상호작용 내용 또는 텍스트(text) 분석에 관한 것이다. 두 주체의 상호작용 및 소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적, 제도적 활동은 국정감사이므로, 본 연구는 국정감사 관련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 문서인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부 산하에 통상행정이 자리 잡게 된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즉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총 7년의 총 7개의 산업부 관련 시결 보고서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부 관련 시결 보고서 내용 중에 산업부가 담당하는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은 제외하고 통상정책 관련 국회의 요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텍스트 주제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산업부 소관 국정감사 기관 전체 중 특히 3대 기관인 산업부 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는 통상 이해관계자 중 정부와 부처와의 상호작용을 국정감사 시결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TNA 방법론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보고서 내용 주제 분석 결과 요구사항, 결과 보고, 추진계획이라는 세 개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산업부 주제 키워드인 기업, 산업, 사업, 관리, 개발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통상 관련해서는 수출, 통상, 무역, 투자, 해외, 국내, 분쟁, 융자, 채권, 협력, 효율, 협상, 서비스, 기술, 홍보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감사 내용담
게 관리, 관련, 방안, 지원, 마련, 확대, 대응,
검토, 개선, 강화, 대책, 예정, 추진, 이행, 지속,
계획 등의 주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2019년도 시결 보고서 사례 분석 결
과, 수출, 투자, 해외 주제어 관련 사항들, 국내
주제어를 포함한 국내 산업 보호 조치에 관련
된 사항들, 그리고 다자 및 양자 통상체제와 관
련한 협상, 분쟁 등의 주제어를 가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정
감사 텍스트로는 처음 TNA 주제 분석이 이루
어졌고, 2019년도 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해 통
상 분야에서 어떤 주제로 한국의 통상부처인
산업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상호작용하고 소통

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통상업무가 산업부 산하에 있는 2013
년~2019년 기간에만 한정된 분석으로, 통상업
무가 외교부 산하에 있던 1998년~2012년 사이
의 기간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추가로 이
루어진다면, 통상이 각기 다른 부처 산하에 있
을 경우 어떻게 행정 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 분
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통상정책에 있어
EU, 미국, 캐나다 호주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책적, 제도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연구 및 분
석 틀이 존재하는 바 이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
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Kerremans,
Adriaensen, Colli and Coremans, 2019)

References

- Abazi, V. and J. Adriaensen (2017), "Allies in Transparency? Parliamentar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terplays in the EU's International Negotiations. *Politics and Governance*", 5(3), 75-86.
- Ahn, Se-Young (2019), *Global Negotiation Strategy*, Seoul: Pakyoungsa.
- Baek, Jong-Hyun (2014), "Text Network-Base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andardization Governance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8(3), 123-147.
- Choi, Sun-Hyang (2018), "Exploration of Educational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from a Account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5), 119-138.
- Ciuriak, D. (2004), "Canadian Trade Policy Development: Stakeholder Consultations and Public Policy Research", *Trade Policy Research*, 2004, 213-246.
- Conceição-Heldt, E. (2011), *Negotiating Trade Liberalization at the WTO: Domestic Politics and Bargaining Dynamic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r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Kindle Edition.
- Cyram (webpage), Available from <https://cyram.tistory.com/249> (accessed Oct. 1, 2020)
- Fordham, B. O. and T. J. McKeown (2003), "Selection and Influence: Interest Groups and Congressional Voting on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9-549.
- Jančić, D. (2017), "TTIP and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in EU Trade Policy", *West European Politics*, 40(1), 202-221.
- Jang, Im-Sook and Yu-Seok Moon (2019), "Social Network Analysis of Communication Structure in Korea Forest Service",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3), 29-51.
- Je, Hyun-Jung (2016), *An Analysis of Public-Private Relationships in Trade Policy-mak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209.
- Kang, Yoo-Duk (2012),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EU Trade Policy Making Procedure: Case Studies

- of Global Europe and Korea-EU FTA",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30(3), 31-64.
- Kaukab, R. S. (2010), *Inclusiveness of Trade Policy-Making* (Issue 70), Commonwealth.
- Kerremans, B., J. Adriaensen, F. Colli and E. Coremans (2019), "Parliamentary Scrutiny of Trade Policies Across the Western World", *European Parliament*.
- Ko, Bo-min (2015), "Korea's Strategies for Becoming an Advanced Trading Nation - A Focus on Trade Legislation and Trade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Policy*, NARS, 7(1), 439-458.
- Ko, Bo-min (2017), "Stakeholder Analysis on Korea's Trade Negotiation", *Korea Trade Review*,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42(5), 161-182.
- Ko, Bo-min (2019), "Analysis on the Trade Governance - a Focus on Korea's Domestic Case", *Korea Trade Review*, 44(6), 161-182.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kita.net/cmmrcInfo/cm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accessed Oct. 1, 2020)
- Kwahk, Ki-Young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2nd ed.), Seoul: Cheong-Ram.
- Lee, Dong-Joon (2016), *A Study on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Otjes, S. and T. Louwse (2018), "Parliamentary Questions as Strategic Party Tools", *West European Politics*, 41(2), 496-516.
- Meong, Jin-ho, Hye-Sun Jeong, Hyung-Jung Je and Sul-Gi Moon (2014), *Korea's 10 Years of Its FTA History*, (IIT Trade Focus, 13-18), KITA.
- Park, Chang-Hyun (2008),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Trade Negotiation*,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Rozenberg, O., O. Chopin, C. Hoeffler, B. Irondelle and J. Joana (2011), "Not Only a Battleground: Parliamentary Oral Questions Concerning Defence Policies in Four Western Democracies",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3), 340-353.
- The National Assembly (webpage), Available from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spect/inspect03.do> (accessed Oct. 1, 2020)